

동향과 분석

- » 북한의 대화공세와 남북관계 전망: 6자회담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3
- » 2011년 미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전망 (이상현) 19
- » 중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신상진) 38

중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신상진 (광운대 국제협력학부 교수)

sjshin@kw.ac.kr

1. 머리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과 발언권이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다. 2001년 이후 미국이 반테러전쟁 명분 아래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치르는데 집중하여 국력을 낭비하고 동아시아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반면, 중국은 ‘화평굴기’와 ‘조화세계’ 구축 담론 하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을 증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2010년 3/4분기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로 도약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성취된 것으로써, 세계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 자신감은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負責任大國)’을 지향하면서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은 ‘도광양희(韜光養晦)’ 전략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의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

국제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개입정책은 특히 한반도문제를 다룰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초 1차 북한 핵위기 시에 중국은 미·북 간 해결을 수용한 반면, 2003년 이후 2차 북한 핵위기 시에는 6자회담을 주도하는 등 적극 개입정책으로 전환했

다.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극한 대립을 보일 때, 중국은 미·북의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3자회담을 거친 후 6자회담 구도를 만들어 북한 핵위기를 관리해 왔다. 2006년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체제를 위협함으로써 북한 핵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을 때에도 중국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면서도 미·북간 접촉을 중재하여 한반도 위기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오바마 집권 후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자 북한은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차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여 한·미에게 대화와 대가를 요구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도발에 직면하여 한·미 주축 하에 국제사회는 안보리 의장성명과 제재 결의 채택 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6자회담을 전면 보이콧하고 한국관광객 살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무력도발 행위를 자행하여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은 긴 국경선을 마주하는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안보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게는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북한에게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 위기상황을 고조시키지 말도록 설득하여 왔다. 중국은 현단계에서 북핵문제를 처리하고 한반도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효한 무대는 6자회담이라고 보고,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한·미 동맹 강화추세를 막을 수 있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속에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북핵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6자회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북한은 경제력에서 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도 한국에 비해 크게 열세에 처해 있고 배후에 믿을만한 동맹국도 없는 상황에서 체제 보루의 최후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다. 2번에 걸친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여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

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나, 북한은 오히려 유엔 안보리 1874호 제재 결의와 한·미·일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 인터넷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미 외교안보 당국자 간에는 북한이 머지않은 미래에 붕괴될 것이라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한·미가 북한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2010년 말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한반도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북한 붕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핵무기 실험 이후 북한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북한 간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명백하게 패배하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남북관계가 또 다시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비대칭적 군사수단을 통해 부단히 대남 도발을 벌이고 있고, 한국의 보수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 아래 핵포기와 무력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진정성을 보이기 이전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남북한 간 긴장국면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띠어 왔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악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대처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 2012년 4월로 합의된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도록 요구하여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는 동해와 서해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간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양국의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2+2 안보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계기로 한·미 간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제재하고 응징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중국이 과연 ‘책임 있는 강대국’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일어났다. 결국 수교 18년에 들어선 한·중관계는 북한문제와 한·미 동맹 강화로 인해 불신의 골이 깊이 파이게 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의 대미 동맹 강화와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완력을 사용하여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으며,¹⁾ 한국에서는 중국의 위협적인 태도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한반도에서 나타난 이러한 정세변화는 동아시아 역내문제에 미국이 더욱 깊숙이 개입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한국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미국은 이러한 환경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와 서해에 진입시켰으며, 다오위다오(센카쿠섬) 영유권문제와 남중국해문제에 대해서도 개입하여 중국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악화된 한반도 안보정세가 역내에서 미·중간 군사갈등을 촉발하는 등 중국의 국익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로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인해 조성된 한반도 안보환경이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고 응징하기보다는 한·미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 보였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남북한 간 대화가 단절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한국정부에게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²⁾ 또한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진입시킨 더 근본적 목적은 북한의 군사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보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려는 데에 있다는 판단이 지배했다.³⁾ 한반도 안보정세 불안정을 가져 온 원인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인식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대한 의구심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대한 중국의 강한 불신은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가치를 중시하도록 하는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3.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와 정책수단들

중국내 국제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북한은 중국에게 부담으로 밖에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정부가 북한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 목표는 첫째, 북한의 안정

1) “中國對韓國應該打壓還是拉攏?” <http://debate.huanqiu.com/2010-07/974765.html> (검색일: 2010.7.29).

2) “難以平靜的朝鮮半島,” 『中國青年報』, 2011.1.7.

3) “2010年7月8日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http://www.mfa.gov.cn/chn/gxh/tyb/fyrbt/t714888.htm> (검색일: 2010.7.8); 羅援, “美航母若進黃海,將激怒中國民意,”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08/995900.html> (검색일: 2010.8.9).

을 유지시켜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며 둘째,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 북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며 셋째,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 북한붕괴 방지

2008년 여름 김정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이후 북한의 대내 정치불안이 심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 강화로 경제난과 국제고립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체제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일은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사회주의 이념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권력세습을 통해 정권안정을 기도하고 있지만, 약관 28세의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권력기반을 장악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로 식량과 기본 생필품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외화사정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체제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안보위협에서 벗어나고 한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한·미가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불안정 심화는 곧바로 중국 동북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북한주민이 중국 국경지역으로 밀려들 것이며, 중국은 이들을 수용하는데 커다란 부담을 지拂해야 할 것이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집권 이후 균형발전 전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계획’과 ‘장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체제가 붕괴될 경우 현실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이 경우 중국은 국경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직접 마주하게 된다. 북한의 붕괴는 중국에게 엄청난 군사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전체를 목적으로 동아시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과 강력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의해 북한이 흡수통일되는 것을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중국의 세력범위 상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간주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는 북한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

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식량과 원유 등 전략물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여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반중국 성향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북한의 내정에 대해 불간섭원칙을 견지하고 접촉을 확대하여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어 북한이 붕괴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최소한도의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긴밀한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북한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여 긴장국면을 악화시킬 경우에는 중국이 중·북 관계가 동맹관계에 있지 않고 정상적 국가간의 관계라고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위기국면을 고조시키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제어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북 동맹관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한·미의 군사공격 가능성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1996년 ‘신안보 개념’을 냉전이후 시대의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제시한 후 세계 어떤 나라와도 동맹관계를 구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중·북 동맹조약은 202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에게 과도한 압박과 제재수단을 동원하는데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에 찬동하였지만, 실제로 북한에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중국이 대북 제재·압박 조치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불안정 심화 나아가 붕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붕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자신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중국이 한·미가 줄곧 제의해 온 북한급변사태 논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북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까지도 공개적으로 한·미와 북한급변사태를 협의하게 될 경우 북한정권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한·미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김씨 정권에 대한 반

대세력을 결집시킬 가능성까지 있다. 북한이 가지는 전략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선택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북한 개혁·개방 설득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된 후 중국이 북한의 물질적 후원자 역할을 홀로 떠맡고 있다. 중국은 매년 30만톤 내지 5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우호가격 또는 국제시장가격으로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일부는 무상원조 형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난이 더 심각한데, 북한이 도입하는 원유의 거의 전량이 중국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강력하게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한이 존속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북한경제가 붕괴 직전의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근본적 이유는 고도의 계획경제라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며,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북한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중국은 ‘동북진흥계획’의 성공적 추진차원에서 북한 지하자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북한 나진항과 청진항 개발·사용권을 확보하였고, 2010년 8월 후진타오 주석이 김정일에게 ‘정부주도’로 중국기업의 북한 진출 확대를 약속하였으나, 북한의 투자여건이 극히 열악하고 리스크가 너무 커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미국 다음의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생존을 전적으로 책임질 만한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다. 중국 내에는 북한을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는 북한 지도부에게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사례를 긴 시간 동안 소개하고 북한의 정책변화를 주문하였고, 2010년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에게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경제정책 변화를 촉구했다.⁴⁾

4) “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 <http://military.people.com.cn/GB/172467/11543524.html> (검색일: 2010.5.7).

중국은 북한에게 경제정책 변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기를 바라지만, 강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자존심이 강한 북한에게 개혁·개방정책을 강요할 경우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중심이 깊지 않은 북한의 체제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5월 김정일 방중 시 후진타오 주석이 중·북간 “내정과 외교 중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을 강조하였지만, 중국은 북한의 내정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개입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채택하여 경제난국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강요하지는 않고 있다.

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국력이 급격히 강화됨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접경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중국내 전통주의자들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중국의 세력권 내에서 존속하기를 바라면서 북한과 정치·경제·안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이유는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문제, 인권문제, 무역역조문제, 지구온난화문제 등을 통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중국해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안전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⁵⁾ 북한은 중국과 1,300km가 넘는 긴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안보위협을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나라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중관계가 갈등국면으로 치닫게 될수록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 가지는 전략가치는 더 중시될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려 할 것이다.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동아시아 역내

5) 李永明, “中美在亞洲角力的新動向,” http://www.zaobao.com/yl/tx101122_001.shtml (검색일: 2010.11.22); “美國全方位部署亞洲, 遏制中國崛起,” <http://www.dwnews.com/news/2010-10-29/56616661.html> (검색일: 2010.10.29).

에서 중·일간 영향력 강화를 둘러싼 경쟁 때문이다. 역사적·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양국의 경제력이 역전되는 과정에 있어 어느 일방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문제를 주도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북과 일·북 관계개선 합의에 대해 중국이 보인 반응에서 이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으며, 중국이 주도한 북핵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일본은 납치문제를 이유로 6자회담 진전을 가로막은 바 있다. 중국은 국제고립 해소차원에서 북한이 일본과도 수교회담을 진전시키기를 바라지만,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일·북관계가 진전되는 데에는 우려하는 입장이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주변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북한의 비정상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제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북한이 2차 핵무기 실험을 감행한 뒤 중국은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상실하고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일시적으로 미국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경제 및 정치·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2003년 4월 북한이 당초의 입장을 변경하여 3자회담에 참여한 결정적 이유는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에게 최소한도의 경제원조를 통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최고위 지도부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중요한 대내외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⁶⁾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대가로 북한을 중국의 세력범위 내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

6) 2010년 김정일 방중 시 후진타오는 김정일에게 고위층간 접촉·교류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양국 지도부간 교환방문을 확대하여 중·북 간 대내외 정책협의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4.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입장과 전략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북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그리고 10.3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으나, 2008년 말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다. 먼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본 뒤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을 분석·전망하기로 한다.

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대내 경제발전에 유리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외정책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의 입장과 달리,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게만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한국도 핵무장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이나 과도한 압력수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을 때에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과도한 압박과 제재조치를 단행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중국은 또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니고 있는 안보위협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은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결정적 이유는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북한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완화·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다소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7) 邱震海, “如何幫助朝鮮開啓對外開放進程?”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75495> (검색일: 2010.4.25).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추구함으로써 북핵 폐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해진 뒤에는 북핵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정책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탄두를 폐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붕괴방지와 한반도 안정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과도한 대북 제재·압박조치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핵 폐기를 설득하는 한편, 한·미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북핵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중국은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남북한과 미, 중, 일, 러 등 북한핵문제 관련 주요 당사국들을 모두 포괄하는 회담 구도이기 때문에,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 자신이 의장국으로서 회담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다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국이 북핵문제뿐 아니라 한반도문제와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 6자회담을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북한 핵문제와 같은 동북아 지역안보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감한 지역 안보이슈를 무력이나 압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평화 애호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한·미·일 간 안보동맹관계가 강화되는 한편 중·북 관계가 밀착되는 등 동북아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유관국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의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어 곧바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금년 1월 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긴장완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남북간 군사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문제로 미·중관계가 갈등하게 되면 중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북핵 제재·갈등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조기에 전환하고자 6자회담 재개를 역설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초부터 6자회담 재개 순서로 미·북 접촉 → 예비회담 → 본회담을 여는 방식을 유관국에게 제안했다. 중국이 미·북 접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거부하여 중국이 바라는 방식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은 남북한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한편,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고 미국의 입장변화를 유도하여 6자회담을 재개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강행으로 남북한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중국은 북한에게 대응사격을 하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남북 군사 긴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미국과 한국에게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미·북간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곧바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거쳐 6자회담 본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상황을 더 긴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금년 1월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인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반해,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⁸⁾ 미국은 북핵 6자회담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먼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인 반면,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9 공동성명 제4항에 따르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6자회담이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제기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6자회담의 조기 재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⁹⁾ 또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로 남북한과 중·미를 상징

8) “中美兩國在華盛頓發表聯合聲明,” <http://news.sina.com.cn/c/2011-01-20/072121844656.shtml> (검색일: 2011.1.20).

9) 時永明, “恢復六方會談無須先決條件,” 『北京周報』, 2010년 第6期 (2010.2.11); 張璉瑰, “朝鮮追求和平協定目的何在,” 『環球時報』, 2010.2.26.

하고 있어 6자회담 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도 적극 찬동하지 않는다. 중국은 특히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반대한다.

5. 맺는말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정치·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직간접적으로 설득하는 동시에, 미·일·한국을 상대하는데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대처하는데 있어 전략적으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데 명확하게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핵 저지보다는 북한의 안정유지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이후 한·미를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간 군사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대북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¹⁰⁾ 2011년 1월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던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남북대화 필요성을 밝혔으며, 곧바로 개최된 후진타오-오바마 정상회담에서도 미·중 사이에 6자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었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강화되고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편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여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생존을 유지하려 함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제재·압박국면이 지속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이 사이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는 등 핵무장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와 협력하여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북한이 핵보유 국가로 발돋움하기 이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10) Joel Wit, "Time to Get Serious About North Korea,"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12/13/time_to_get_serious_about_north_korea (검색일: 2010.12.14).

정착시키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더욱이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新形勢下中國外交與對外戰略,” 『現代國際關係』, 2010年 第11期.
- 虞少華, “東北亞安全形勢與中韓戰略合作,” 『國際問題研究』, 2010年 第5期.
- 楊潔勉, “新時期中美合作的動力和阻力,” 『國際問題研究』, 2010年 第5期.
- 劉建華, 于水歡, “多邊施壓: 美國對華外交策略新動向,” 『現代國際關係』, 2010年 第10期.
- 戴秉國, “堅持走和平發展道路”,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774662.htm>.
- 時殷弘, “非傳統安全與中美反擴散博弈”, 『現代國際關係』, 2010年 第5期.
- “中國對韓國應該打壓還是拉拢?” <http://debate.huanqiu.com/2010-07/974765.html>.
- 時永明, “恢復六方會談無須先決條件”, 『北京周報』, 2010年 第6期.
- 張璉瑰, “朝鮮追求和平協定目的何在”, 『環球時報』, 2010.2.26.
- “中美两国在华盛顿发表联合声明”, <http://news.sina.com.cn/c/2011-01-20/072121844656.shtml>.
- 邱震海, “如何幫助朝鮮開啓對外開放進程?” <http://www.chinaelections.org/NewsInfo.asp?NewsID=175495>.
- “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 <http://military.people.com.cn/GB/172467/11543524.html>.
- “難以平靜的朝鮮半島”, 『中國青年報』, 2011.1.7.
- “中國對韓國應該打壓還是拉拢?” <http://debate.huanqiu.com/2010-07/974765.html>.
- Cai Jian, “The Korea Nuclear Crisis and the Changing Sino-DPRK Relationship”, *Asian Perspective*, 34: 137-158, 2010.
- Nanto, Dick K, Mark E. Manyin and Kerry Dumbaugh, “China-North Korea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January 22, 2010.
- Joel Wit, “Time to Get Serious About North Korea”,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12/13/time_to_get_serious_about_north_korea.